

성명	양승욱	직급	서기관
훈련국	미국	훈련기간	2022. 7. 26. ~ 2024. 5. 21.
훈련기관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보고서 매수	177매
훈련과제	혁신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벤처투자, R&D, 창업지원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 제목	혁신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벤처투자, R&D, 창업지원 정책 연계 방안		
내용요약	<p>I. 서론</p> <p>혁신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R&D, 창업지원, 벤처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경제학적 시장실패 및 미국의 정책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p> <p>II. R&D, 창업, 벤처투자의 중요성 및 시장실패</p> <p>R&D, 창업 및 벤처투자는 혁신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p> <p>그러나 경제적 중요성이 곧바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실패는 경제 주체들이 개별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R&D, 창업 및 벤처투자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에 따른 불공정거래,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기피, 공공재의 제공, 경기변동, 형평성 등 다양한 시장실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의 존재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p> <p>혁신기업의 역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경제학적 분석, 행정학적 분석, 미국 사례 연구 등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p>		

III. 미국의 R&D, 창업, 벤처투자 현황

1. 미국의 R&D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등의 부처별 R&D 지원이 있고,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이 있으며, 관련 R&D 세제 지원도 있다.

2. 미국의 창업 및 스타트업

스타트업 멘토링 서비스인 SCORE,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과 함께 협업하는 모델이 많다. 주요 액셀러레이터로 와이 콤비네이터(Y Combinator [YC]), 테크스타 (Techstars), 500 글로벌(500 Global), 매스챌린지 (MassChallenge),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Plug and Play Tech Center), 엔젤패드 (AngelPad) 등이 있고, 미국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전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회 특구, 해외 진출 지원, 특허 지원 등도 있다.

3. 미국의 벤처투자

미국 중소기업청(SBA)는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 세제 지원 등 간접적인 벤처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보국 (CIA)는 인큐텔(In-Q-Tel), 국방부는 온포인트테크놀로지 (OnPoint Technologies)이라는 벤처캐피탈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인 벤처투자를 하고 있다. 세제 측면에서 도관 이론(Conduit Theory, Pass-Through Taxation)을 통해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유연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V. 한국에 시사점

1. 제도 개선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정부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 세제에 도관 이론 도입: 펀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수익이 분배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도관 이론(Pass-

Through Taxation)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도관 이론을 도입하면, 정부가 직접 새로운 벤처금융 기법을 제도화할 필요 없이 민간이 최신 기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부가 미국 등 국제적 벤처금융 기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3) **벤처투자자 보호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투자 전문 법원 설립,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 **정보비대칭 완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 정부의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스톡옵션 등 **성과 기반 보상 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2.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제도개선이 중요하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R&D, 창업, 벤처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

(1) **민간의 선별역량 활용:**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며, 특히 TIPS 프로그램과 같은 민간과의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2) **엑셀러레이터 육성:** 부처별 산업 특화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멘토링을 강화**해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투자자와 연결도** 도와야 한다. 더불어 엑셀러레이터간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진대회와 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3) **정부의 벤처투자 개선:** 정부가 직접 벤처투자에 참여하기보다는 민간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벤처투자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별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시장에 맡겨서는 충분한 투자가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가 직접 벤처투자를 해야 한다.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직접 벤처투자를 하는 수단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SBIC와 같이 보증을 활용한 지원 방식도 한국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4) 출연 보조 방식에서 투자로 전환: 성공불 방식, 보조와 투자 융합, 보조와 융자 융합 등 정부 지원에 투자를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자금 공급은 늘리고, 정부 재정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3. 네트워킹 활성화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과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네트워킹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1) 산학연 네트워킹: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 혁신 클러스터 정책 추진, 기술이전사무소 정책 추진, 민간 합동 R&D 등 민관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참여하는 주체간 구체적인 계약 합의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여 지식 공유 및 기술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네트워킹: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각종 행사 주최 또는 지원을 통해 창업자와 벤처투자자 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는 네트워킹을 정부가 촉진해야 한다.

(3) 국내외 네트워킹: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한국인 해외기업 지원, 벤처투자펀드 해외 투자 규제 완화, 중소벤처담당 주재관 파견 확대 등 아웃바운드 정책과 해외기업과 투자자 국내 유치, 외국인 비자 완화, 글로벌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 인바운드 정책을 추진해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V. 결론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혁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의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R&D, 창업, 벤처투자 정책의 분석과 전략적 정책 제안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하며, 각 제언의 구체적인 제도화와 지원제도에의 적용을 통해 한국 경제가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